

화학단지, 화학물질 방재센터 설치

환경부, 전라남도 지원요청 거부 ... 정부 차원의 국가기구로 추진

여수산업단지에 <화학물질 종합방재센터>가 국가기구로 설치된다.

전라남도는 최근 종합방재센터 설치에 따른 국비지원 건의에 대해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전담조직과 성격이 중복된다”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7월2일 밝혔다.

화학물질 방재센터 설치에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만큼 전라남도의 국비지원 요구는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국가산업단지인 여수와 울산, 대산 등 3곳에 방재센터를 설치할 계획 아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재센터를 3곳 중 1곳에만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3곳 모두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는 4월 여수산업단지에 유해화학물질 감시예측시스템, 악취 분석 장비, 상황실 등을 갖춘 종합방재센터 설치를 위해 정부에 국비 162억원 지원을 요구했다.

여수산업단지는 화학공장의 설비 노후화로 대형 재난발생 위험성이 상존하고 화학물질 취급량도 전국의 1/3 가량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월 최고위원 회의에서 “여수산업단지에 화학유해물질 종합방재센터가 없다”며 설치 검토를 주문했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등 지역정치권도 6월 여수 석유화학단지에 종합방재센터를 설치하도록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02>